

지방의정 브리프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논의의 초점

• 주민의 대표자이면서 행정의 감시자인 지방의회

-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양대 축인 동시에 지방의회에 부여된 법적인 권한에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이면서 지방행정을 견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대표자 지방의회

-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행정운동을 견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와 부정적 행태들로 인하여 각계의 비판을 받아 왔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제기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함

• 의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역량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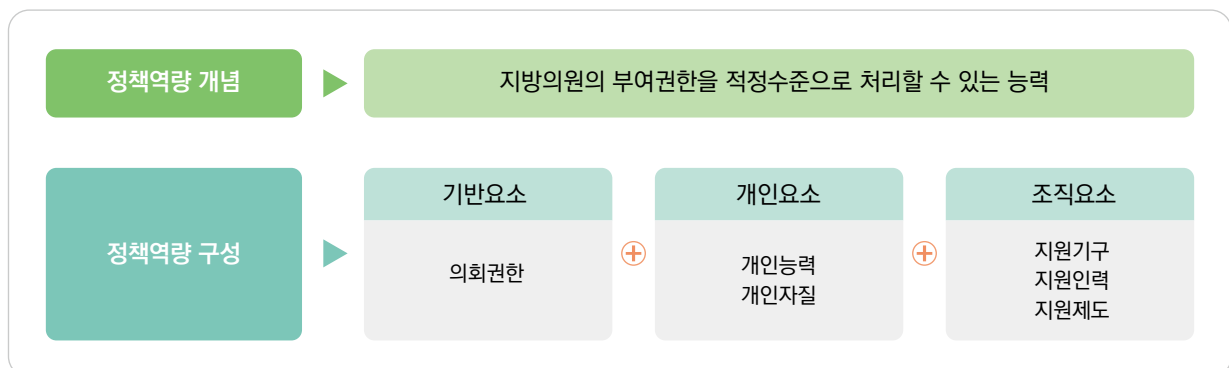
-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평가는 근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자질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책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임

II.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실태

•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개념

-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나 역할을 적정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고, 정책역량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기반요소로서 의회의 권한과 개인요소로서 개인능력과 자질 그리고 조직요소로서 지원기구와 지원인력 및 지원제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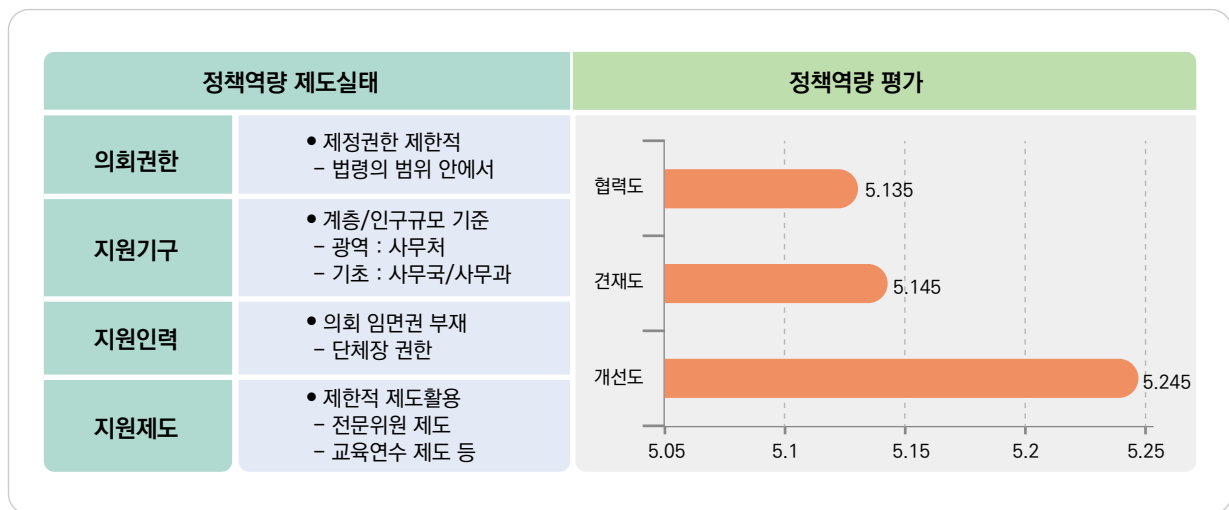
〈그림 1〉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개념



•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실태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관한 제도적 및 평가적 실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입법권한이 제한적이고, 지원기구는 자치계층과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인력은 임면권이 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 역시 전문위원과 교육연수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평가적 측면에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협력수준이나 견제수준이 중간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긍정적임

〈그림 2〉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실태



Ⅲ.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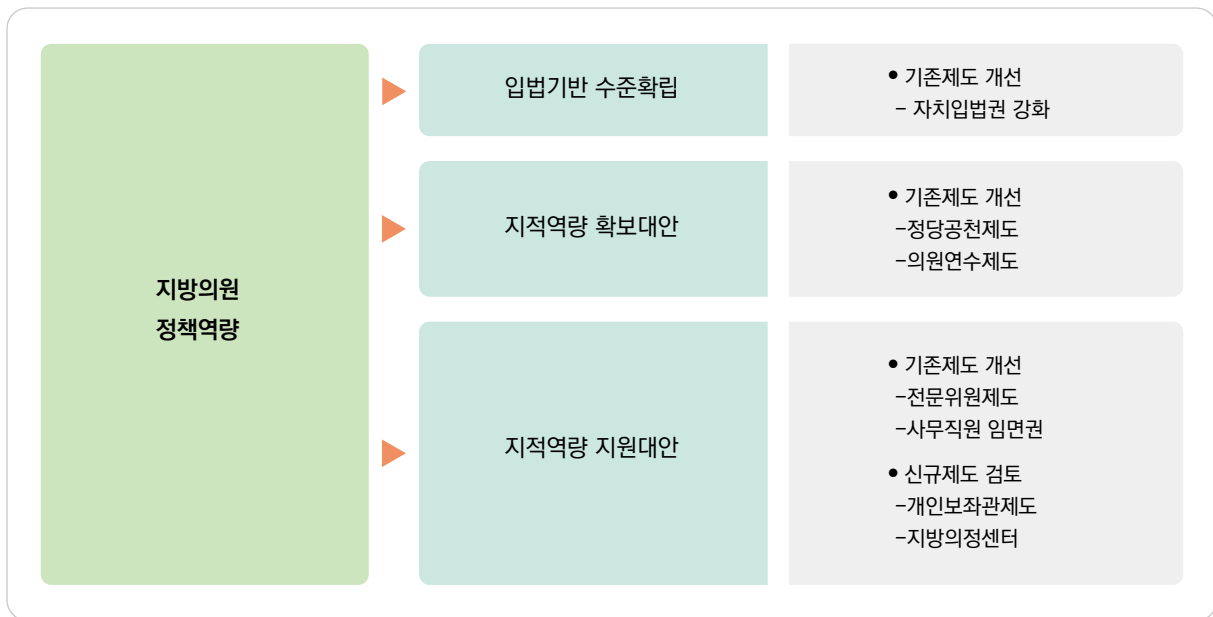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개정사항

- 2020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과 광역의회 사무인력의 임면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사무기구의 독립”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제기된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됨

• 추가적 제도보완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제도개선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의 입법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자치입법권을“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원의 지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체계적인 의원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의원의 지적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위원의 규모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국회의 입법조사처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정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3〉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내용문의 :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33-769-9840, gch@krila.re.kr)